"R&D특구로 과학벨트 와야"

광주·전남 국회의원 17명 '조성·지원 특별법' 오늘 발의

광주시의회도 과학벨트 광주·전남 유치 촉구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7명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광주·전남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18일 공동 발의한다. 광주시의회도 과학벨트 광주·전남유치를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영진 의원은 17일 "내일(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벨트 조성·지원 특별법 발의의 배경을 설명한 뒤 바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벨트의 광주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안은 ▲과학벨트 및 지구 입지 대상을 R&D특구 관할지역으로 하고 ▲입지 요건에 국가균형발전 실현성 등을 추가하며 ▲위원회 심의로 과학벨트 및 지구의 추가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외에 별도 지역에 분원을 둘 수 있으며 ▲기초과학연구원에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되, 지반 안정성이 확보된 지역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정부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과학벨트법은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민주당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며 "대체안 마련 과정에서 충청권 의원들이 과학벨트 입지를 대전, 충남북, 세종시 지역으로 명시한 것은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만한 평가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입지선정의 공정성은 물론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특별법안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지난해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정부의 과학벨트 지원 특별법안과 충청권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과 함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광주 유치를 사실상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시의회는 17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열고 "1970년대 이후 영남권 중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했고,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과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호남지역의 소외와 차별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과학벨트의 광주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는 18일 오전 본회의에서 과학벨트 광주·전남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수석,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회의장,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장 등 16개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성 ROTC 명 받았습니다" 전남대학교는 17일 오후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학군사관후보생(ROTC) 임관·승급·입단식을 가졌다. 이날 전남대학교 ROTC 입단식에서는 지난해 11월 처음 선발된 여성 ROTC 5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군사교육을 이수한 뒤 오는 2013년 첫 여성 ROTC장교로 임관돼 2년4개월 간 복무하게 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균형발전이 먼저…국회의원 선거구 연연말자"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방안 모색 토론회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도시 균형발전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땜질식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편입 대상 지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17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 NGO센터에서 열린 '광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지역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겠다는 단편적인 접근의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주민편의 제고, 주민자치역량 강화, 자치구 간 균형 유지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승호 남구주민회의 사무국장은 "구간 경계조정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치역량을 높이는 초석이 돼야한다"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치인이나 일부 지역대표, 절차적 요식행위에 불과한 주민공청회나 토론회 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미덕 참여자치 21 사무처장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라는 시기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광주의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한 때"라며 "구도심 공동화 현상 심화 같은 구간 불균형 문제를 놔둔 채 선거구 유지만을 위한 조정은 단기간 내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구로 편입되는 인구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보다 더 늘려 동구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 사무처장은 "동구의 인구가 지난 2년간 8000명 감소하고 이 같은 추세가 더 심해질 것을 가정하면 5000명 수준의 인구 편입은 땜질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홍기월 광주시 동구의회 의장도 "구간 경계조정 과정에서 각 자치구의 적정인구는 최소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설정하고,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재경 강기정(광주 북구 갑) 의원 보좌관은 "현재 북을의 인구가 29만7013명으로 인구 상한인 30만928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19대 정계특위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질 지 예측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며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경계조정보다는 구도심 주민의 재산권 하락, 생활환경 악화를 책임지는 자세로 구간균형발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원형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주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라는 기조발제에서 "1995년 이후 자치구 간 불균형이 심화했으며, 과거 10여년 이상 논의된 균형발전과 경계조정 문제를 이번에는 광주시, 해당 자치구,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과학벨트 어떻게 조성되나

기초과학연구원·중이온가속기 핵심시설 거점·기능지구 연계…연구원만 3000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특별법상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이라고 규정돼 있다.

'거점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연계해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거점지구의 입지는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의 용이성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등을, 기능지구는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거점지구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 8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구선 정책기획본부장은 "거점지구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비는 2015년까지 3조500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방안(안)'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은 50명 내외의 연구단 50개로 구성되며 전체 3000명의 연구원과 지원인력이 배치된다. 운영비만 연간 100억원으로, 질량분석기·원소분석기 등 25대 기초연구 기반형 핵심연구장비도 설치될 예정이다.

또 다른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의 경우 1기 건설에만 4600억원이 투입되며 매년 운영비가 5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 선진화를 위한 핵심시설로, 국제적 연구 네트워킹 및 우수인력 유치의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박람회 도로개설 예산 50% 확보

김무성 원내대표 약속 성과 전액 반영 요구…내주 결정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약속한 여수세계박람회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지원〈광주일보 2월 11일자 3면〉이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성과를 내고 있어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14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여수시가 요구한 시가지 도로 개설 사업 2건 예산 481억원 중 50% 가량 지원 약속을 받았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 등은 여수시가 요구한 도로는 시가지 도로로,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데다 만약 지원할 경우 선례가 돼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앞세워 완강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별교부세 지급도 구제역 파동으로 예산이 바닥나 어렵다는 입장을 김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관계자는 "일부 부처의 반대로 애를 먹었으나 김 대표가 지원 의지를 확고히 밝혀 50%가량 예산을 확보했다"며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김 대표가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낙관했다.

여수시와 전남도도 지난 16일 총리실을 방문해 도로 개설 관련 예산 지원을 거듭 요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예산 지원 타당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최종 결과는 다음 주내에 확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11일 여수를 방문해 여수 세계박람회 강동석 조직위원장이 교통 대란 해소를 위한 관련 예산의 국비 지원과 조직위 인력 확충을 건의하자 "1주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확답해 관심을 모았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금성산성

역사문화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도 웰빙관광 1번지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

여유로움이 가득한 곳
역사와 문화 우리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
그리고 수려한 자연환경과 인정이 넘치는 곳
세계가 인정한 슬로우시티, 여유와 낭만이 어우러진 곳
바로 대나무골 담양입니다.

담양군 www.damyang.go.kr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